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 제정의 의의와 성공요건

변호사 노경식

2014. 7. 23.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 제정의 의의



제약, 'CP'퍼레이드에 이은 윤리헌장...찬란한 유산될 수 있나

제약협회 윤리헌장 선포식 둘러싼 상반된 시각

2014. 07. 16. 약사공론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23일 윤리헌장 선포식을 갖는다...관련 업계에선 이번 선포식이 제약업계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출발점이라는 시각과 '무의미한 쇼의 반복' 정도로 보는 상반된 인식이 상존한다.”

제약, 'CP'퍼레이드에 이은 윤리헌장...찬란한 유산될 수 있나

제약협회 윤리헌장 선포식 둘러싼 상반된 시각

2014. 07. 16. 약사공론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기업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선포식은 개별 제약사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특히 과거의 선언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점에 대해선 ‘불가피한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기존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무용론을 일축했다.”

제약, 'CP'퍼레이드에 이은 윤리헌장...찬란한 유산될 수 있나

제약협회 윤리헌장 선포식 둘러싼 상반된 시각

2014. 07. 16. 약사공론

“하지만 일각의 시각은 곱지 않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돼도, 선포식을 가져도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웬만한 업체를 중심으로 선지원이 마무리된 마당에 선포식은 별 의미가 없다며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

“선포식이 제약업계의 찬란한 유산으로 남을 지 향후 제약업계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러나...



“윤리경영(준법경영)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industry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한스-파울 뷔르크너 (Hans-Paul Bürkner) 글로벌 회장 국내언론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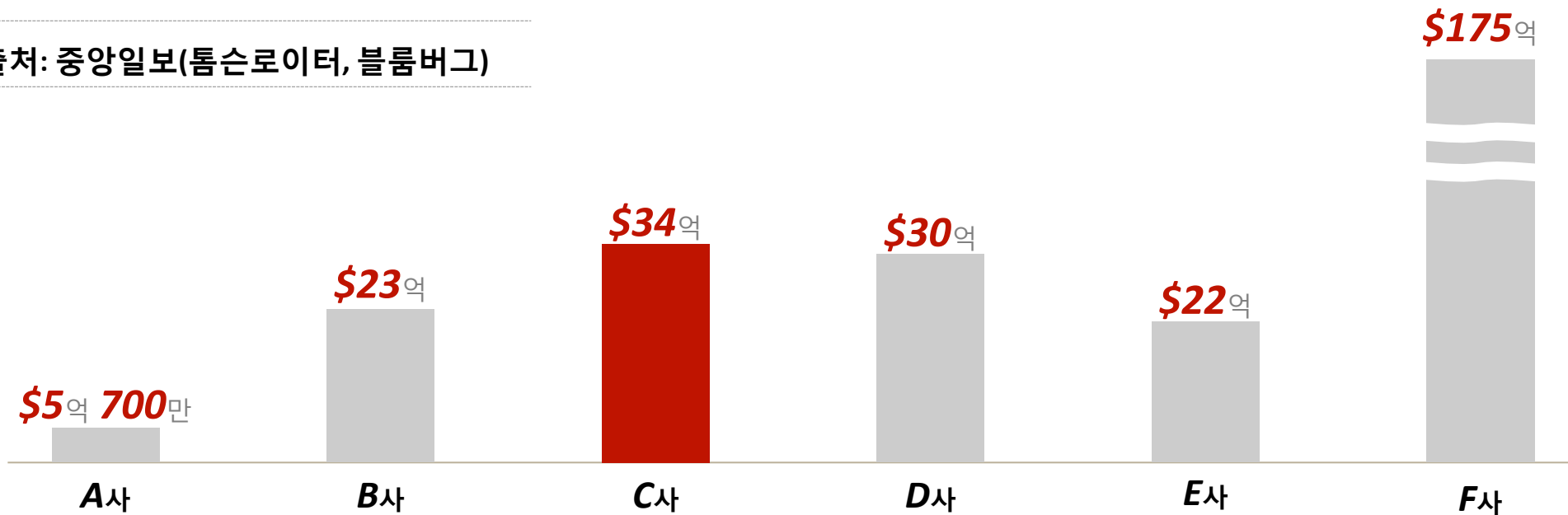
(중앙일보, 2013.11.19.)



- “시계추가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부터 사회 분위기 자체가 변했다”
-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 이제는 CEO들이 법규 테두리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야 한다”
- “회사 내부의 준법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기 전까지 적잖은 CEO가 ‘법규 자체를 바꿔서라도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 “장사 잘하는 것보다 벌금 등을 줄이는 게 최고경영자(CEO)들의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기업들의 벌금 및 배상금

출처: 중앙일보(토스로이터, 블룸버그)



그 해 순익대비 비율(%)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 FCPA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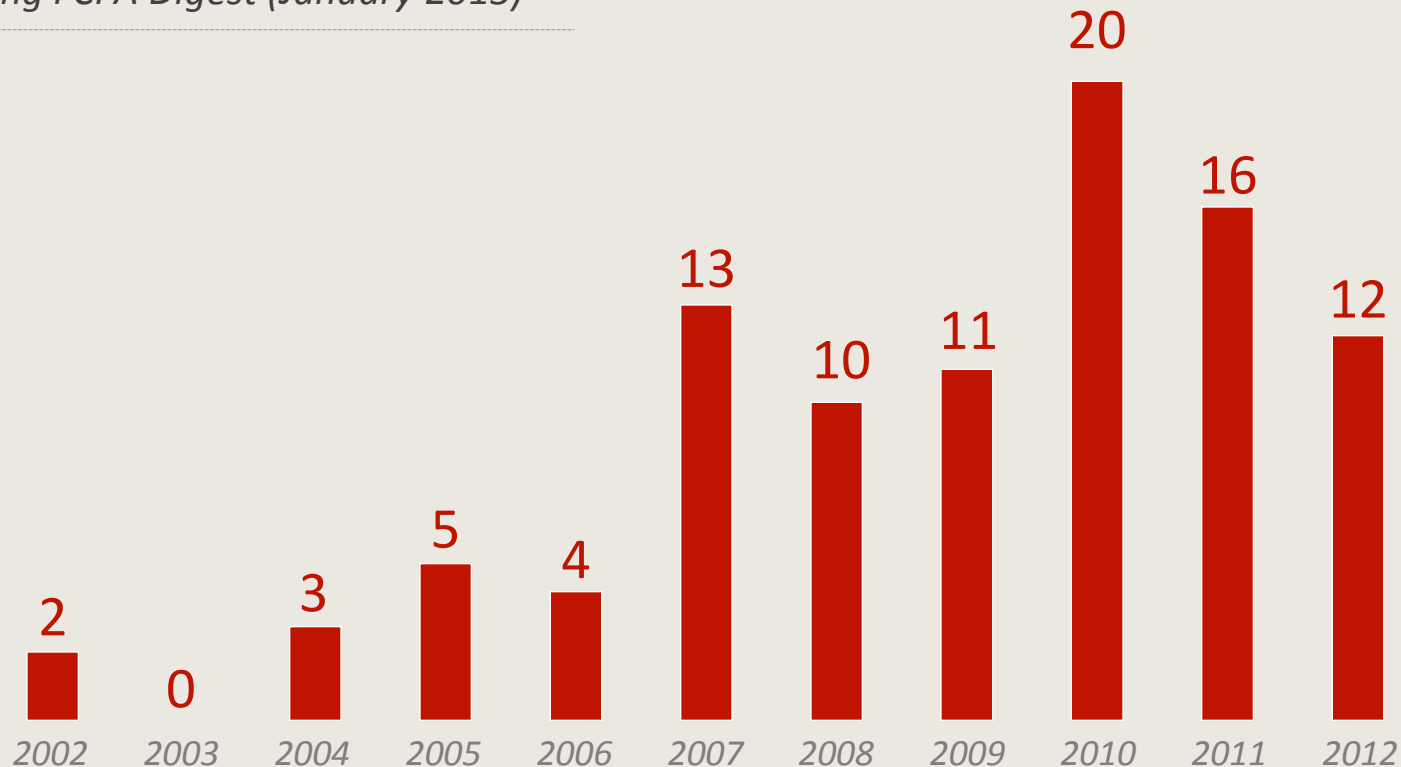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Lockheed가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일본 수상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발각된 후 반부패 여론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77년 연방법으로 제정

미국 FCPA 처벌 사건 추이 (기업)

Total Aggregated Corporate Case (2002 – 2012)

Shearman & Sterling FCPA Digest (January 2013)



영국 부패방지법 (UK Bribery Act 2010)

- ✓ 세계에서 가장 적용 범위가 넓은 부패방지법
- ✓ 국내/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인에게 뇌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
- ✓ 고용주나 사업과 “관련된 자 (associated persons)” 에 의하여 뇌물 제공된 경우 처벌
- ✓ 회사가 회사를 위하여 또는 회사 명의로 뇌물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처벌
- ✓ 실제로 집행된 case는 많지 않으나 FCPA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impact가 큼

국내 다른 industry도 윤리경영이 대세

삼성 12개 계열사 준법경영 선포식 개최

2011. 04. 25. 한국경제

“삼성그룹 모든 계열사들이 ‘법의 날’인 25일을 전후해 준법경영 선포식을 갖는다. 내부 임직원들에게 담합, 지식재산권 침해로 빚어지는 경영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게 이 행사의 취지다.

삼성은 25일 삼성전자 등 12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도한 가운데 각 사별로 준법경영 선포식을 열었다.”

국내 다른 industry도 윤리경영이 대세

삼성 12개 계열사 준법경영 선포식 개최

2011. 04. 25. 한국경제

“이 자리에서 최 부회장은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규와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으며, 잘못된 관행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각 사업부장들과 △경쟁사와 불법적인 협의를 했다는 의심을 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 금전,향응 등 위법한 수수행위를 하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법규위반의 결과를 책임진다는 등을 골자로 한 준법실천 서약서를 작성했다.”

국내 다른 industry도 윤리경영이 대세

메리츠화재, '2013 준법·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2013. 04. 19. 조선비즈

“메리츠화재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본사 27층 대회의실에서 '준법·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다른 industry도 윤리경영이 대세

메리츠화재, '2013 준법·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2013. 04. 19. 조선비즈

“송진규 메리츠화재 사장은 선언문을 통해 ‘준법·윤리경영은 기업이 존경받기 위한 덕목이 아니라 이익과도 직결될 수 있는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내부거래, 완전판매 등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높은 신뢰수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질서 선도적 실천 ▲보험 및 공정거래 법규 준수 ▲민원근절 및 금융소비자 보호 ▲3대 기본지키기를 통한 완전판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법규 준수 등 5대 준법·윤리경영 실천선서를 했다.”

국내 다른 industry도 윤리경영이 대세

조선업계, 2014년 '비리와의 전쟁' 선포

2014. 01. 05. 중앙일보

“국내 조선업계의 올해 공통 경영화두는 ‘준법경영’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 외에도 투명경영 기업이미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빅3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이미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설계·건조기술 경쟁력은 세계 1위를 달리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십억원대 납품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제민주화 분위기와 맞물려 여론의 큰 질타를 받았다. 납품을 위해 로비를 벌이고 하청업체로부터 상납 등을 받는 고질적 관행을 버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주 밀천인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다른 industry도 윤리경영이 대세

조선업계, 2014년 '비리와의 전쟁' 선포

2014. 01. 05. 중앙일보

“이재성 현대중공업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사회는 기업 활동에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행해왔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선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준법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다른 industry도 윤리경영이 대세

조선업계, 2014년 '비리와의 전쟁' 선포

2014. 01. 05. 중앙일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이 ‘준법경영을 통해 청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청결한 조직문화가
흔들리면 서로의 피와 땀으로 일군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다른 industry도 윤리경영이 대세

조선업계, 2014년 '비리와의 전쟁' 선포

2014. 01. 05. 중앙일보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경우 준법 수준을 떠나 아예 모든 비리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뿌리뽑는 새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사장은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도 어느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제약산업도 어느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2007. 10. ○ 공정위, 10개 제약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2009. 08. ○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2010. 11.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011. 04. ○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창설

2014. 07. ○ 리베이트 수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및 퇴출 제도(투아웃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근거

부당고객 유인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제약산업도 이미 환경이 바뀌었다”

2007. 10. ○ 공정위, 10개 제약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2009. 08. ○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2010. 11.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011. 04. ○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창설

2014. 07. ○ 리베이트 수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및 퇴출 제도(투아웃제) 시행



약가 연동제



- 2009. 8. 1. 시행
- 리베이트 적발 시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
- $\text{인하율} = \text{리베이트 제공금액} / \text{해당 의약품 처방 금액}$
- 투아웃제 시행 이전까지 제약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

“제약산업도 이미 환경이 바뀌었다”

2007. 10. ○ 공정위, 10개 제약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2009. 08. ○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2010. 11.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011. 04. ○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창설

2014. 07. ○ 리베이트 수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및 퇴출 제도(투아웃제) 시행



쌍벌제 처벌 및 행정처분

리베이트 제공자 

행정처분

- 식약처
 - 당해품목 1, 3, 6개월 판매업무정지(1~3회 위반)
 - 품목허가 취소 (4회 위반시)
- 복지부
 - **2014. 7.부터 급여정지 / 퇴출**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 제공자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쌍벌제 처벌 및 행정처분

리베이트 수령자 

행정처분

1년 이내 자격정지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2~12개월의 6단계 세부기준)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경제적 이익 몰수/추징)

“제약산업도 이미 환경이 바뀌었다”

2007. 10. ○ 공정위, 10개 제약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2009. 08. ○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2010. 11.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011. 04. ○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창설

2014. 07. ○ 리베이트 수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및 퇴출 제도(투아웃제) 시행



전담수사반

- 2011. 4.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 **전담수사반 활동기간 연장**
 - 1차 연장 (~ 2013. 4.)
 - 2차 연장 (~ 2014. 4.)
 - 3차 연장 (~ 2015. 4.)
- 전담“수사단”으로 조직 보강,
서울서부지검으로 이동 (2014. 3.)



“제약산업도 이미 환경이 바뀌었다”

2007. 10. ○ 공정위, 10개 제약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2009. 08. ○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2010. 11.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011. 04. ○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창설

2014. 07. ○ 리베이트 수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및 퇴출 제도(투아웃제) 시행

리베이트 투아웃제

국민건강보험법 2014.1.1 일부개정, 법률 제12176호, 2014.7.2. 부터 시행

주요 내용

리베이트 1차 적발시 급여 “정지”, 2차 적발시 급여 “제외” (투아웃제)

- I. 리베이트 1차 적발 약제 →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가능
- II. 동일 약제가 2차 적발 →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고려하여 요양급여 적용 제외 가능

특별한 사유 있을 시, 과징금 대체 가능

- I. 약제를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 II.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 투아웃제

개정이유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

입법과정

3개의 의원 입법 법률안을 대체하는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 2013. 12.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재석 20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8인)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94호	남윤인순의원	`12.9.14.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12.11.5.)
	제4499호	남윤인순의원	`13.4.15.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3.6.17.)
	제6373호	김현숙의원	`13.8.16.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13.12.20.)

리베이트 규제 추가 강화 움직임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각 1건이 국회 계류중 (2012.11.01. 국회 제출)

주요 내용

리베이트 제공자 범위 확대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제공자가 “누구든지” 처벌될 수 있도록 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강화

- 과징금 상한 상향: 5천만원 → 5억원
- 형량 강화: 2년 이하 징역 → 3년 이하 징역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 사실의 공표 제도 도입

- 규정위반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개설허가취소를 받은 의료기관, 면허취소를 받은 의료인, 약사, 한약사에 대하여 그 내용과 인적사항을 공표

공익신고자보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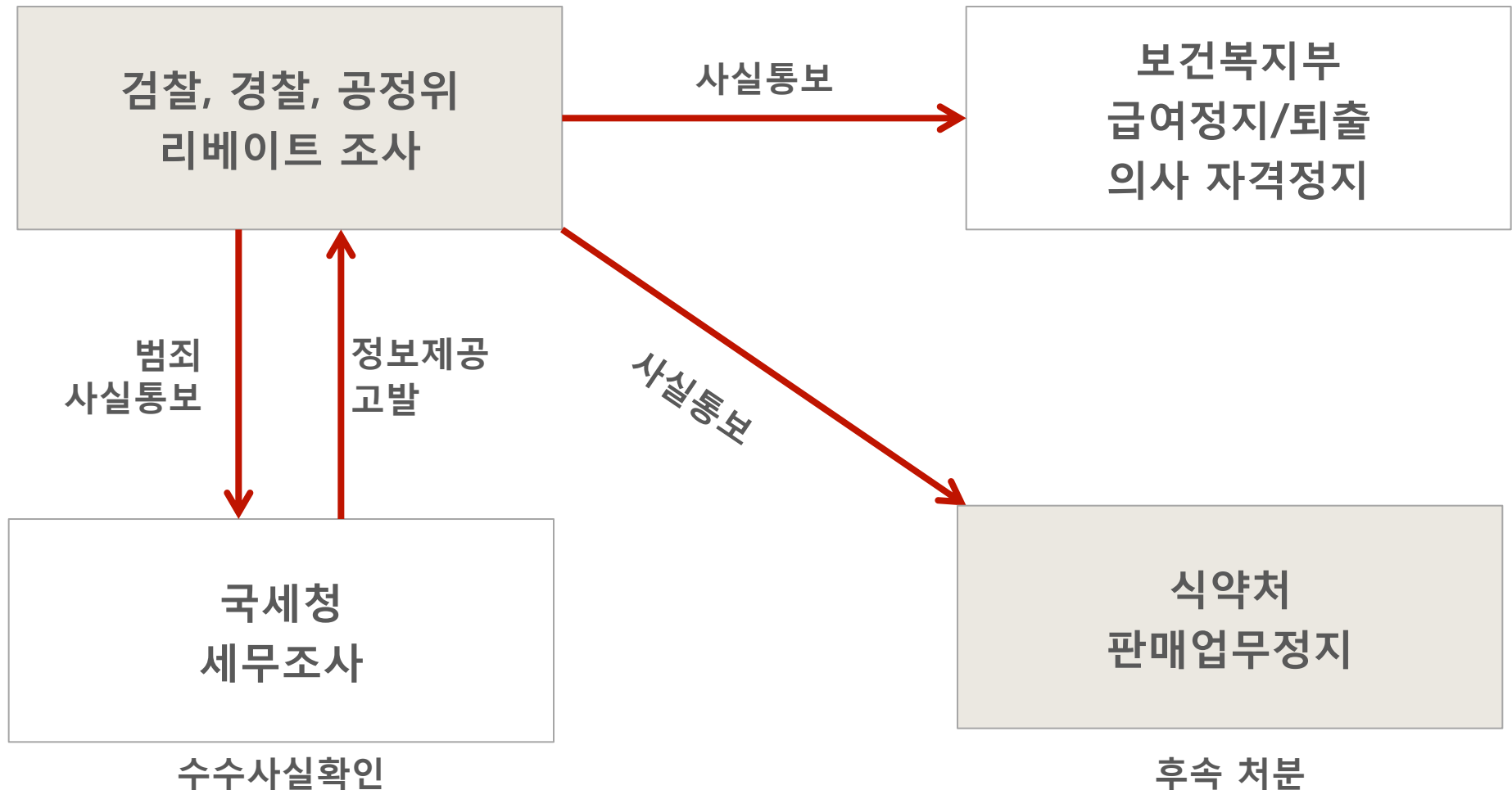
✓ 리베이트·담합 등 사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규정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익명성 보장, 필요한 경우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 신고자 개인에게 신분상 또는 사업상 불이익을 가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

✓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 (몰수/ 추징금, 국세/지방세, 벌금/과료,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실제 부정한 이득이 국고로 환수된 경우)

리베이트 관련 범정부 공조 체제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 현황

남윤인순 의원실 자료

처분의뢰연도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업체	계
전체	84	28	13	125
'10년	10	0	0	10
'11년	42	18	2	62
'12년	29	5	8	42
'13년(8월)	3	5	3	11

- 쌍벌제를 시행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모두 225명의 의사와 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음

윤리헌장 제정의 의의

1

준법/윤리경영은 이미 시대적 대세

2

제약환경도 이미 어느새 변화

3

윤리 헌장 선포는 꼭 필요하며 시기적절

윤리헌장 제정의 의의

국내외 동향에
대응하여 신뢰
제고

제약업계의
자정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

업계 내
기본규범의
통일적 확립

인류 공동의
가치를 포함하는
국제적 규범의
선언

회원사 내규
제정을 위한
기준 제시

윤리인증제도
시행의 초석

▶▶ 제약업계 기업준법과 윤리성 제고

성공요건



“경영이념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준법 토대 하의 매출 신장”

종전의 경영 이념: 매출 신장/성장

준법 토대 하의 매출 신장/성장으로 변경되어야

- 준법하느라 매출이 줄었다면 과연 그 매출은 정당한 것인가?

손실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자세가 필요

“준법 토대 하의 매출 신장”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하여 윤리경영이 이윤 추구 활동과 함께 가야 함

지멘스 AG 피터 뢰셔 (Peter Löscher) 사장 (2007 년 취임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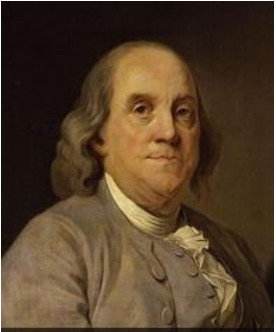


“윤리와 성장, 이 둘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윤리경영은 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윤리경영과 매출신장/성장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정직한 행동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

Benjamin Franklin(1706~1790)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러한 경영이념이 위로부터 아래에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경영진의 준법 의지가 임직원에게 분명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CEO

“A 본부장, 금년도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compliance**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 봅시다.”



영업본부장 **A**

“원칙대로 해서 어떻게 매출을 올려?”

“걸리지만 말라는 말이지!!”



강남지역 영업사원 **C**

“사장님의 속뜻은 알아서 하라는 거야”



서울지역 영업과장 **B**

“만약 경영진의 준법 의지가 임직원에게 분명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윤리규정 “따로” 영업 행태 “따로”

임직원 사이에 “눈치껏 하고 걸리지만 말자”는 의식이 팽배

종전의 관행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음

결국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게 됨

어떻게 하면 경영진의 의지가 전달될 것인가?

준법영업이 정착되기까지 지나친 매출달성 압박을 지양

법무/준법 부서의 의견을 경청

- 때로는 현업부서와 견해 대립 시 무게를 실어줘야

신상필벌(信賞必罰)

“준법을 위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교육/점검”

준법 시스템 구축 및 운용

- 사내 법무/준법 부서를 중심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담
- 주요 의사 결정 및 마케팅 회의에 법무/준법 부서의 참여
- Compliance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충실한 교육

- 연간/반기/분기별 주기적인 Compliance 교육 필요
- 수시로 부서장이 주축이 된 영업/마케팅 직원 교육 고려

철저한 점검

- 정기/수시 내부 감사/진단 실시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재정비

준법 활동의 중요성

某 글로벌 기업

부패방지 Compliance Program을 잘 구축하고 운용한 점을 고려하여 회사는 면책

고려 요소

- 사내 risk 요소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업데이트
-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FCPA, 내부통제제도 및 기타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부서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관련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감사를 진행하며, 관련 진단을 실시
- 중국 정부투자기관과 합작사업을 진행하면서 합작 파트너에 대하여 신용조회, 임원 신원조회, 관련 기사 분석, 로펌을 통한 자료 검토, 경영진 인터뷰 등 철저한 실사를 진행
- 중국 자회사 직원의 뇌물 제공행위를 금지하지 못하였지만, 충분한 사전 점검을 한 점을 고려하여 회사는 처벌하지 않고 직원만 처벌

“윤리경영의 성공적 정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